



세종연구소

경제와 정책

1 2006년 국제정세 전망

이상현

신년특집: 2006년 정세

5 2006년 북한 정세와 남북한 관계

정성장

2006년 국제정세 전망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shlee@sejong.org

9 2006년 미국 정세

이대우

13 2006년 중국 정세

이태환

17 2006년 일본 정세

진창수

21 2006년 러시아 정세

정은숙

2005년 국제정세 회고

2005년의 국제정세는 크게 보면 9·11 이후 계속되는 테러의 위협과 미국 중심의 일방적 국제질서가 새로운 단계로 옮겨가는 조정기의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국제정세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적으로는 범세계적인 반테러 국면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을 위시한 중국, 일본, EU 등 주요 강대국 그룹의 국내 집권기반이 선거 등을 통해 강화·재구축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한 자국중심주의 경향과 경제이익 확대 요구가 강화되어 온 시기였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곤경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연성권력은 점차 약

화되었고, 조류독감과 허리케인 카트리나, 쓰나미 지진해일, 대규모 지진 등 각종 인재와 자연재해가 겹쳐 2005년 국제정세는 결코 평탄하지 않은 양상을 보여주었다.

미 본토를 겨냥한 알-카에다의 2002년 9·11 테러 이후 벌어진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테러는 통제하기 힘든 지구촌의 문제로 커져 버렸다. 대화와 관용이 아닌 무력을 동원해 테러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이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9·11 테러 후 미국은 범세계적인 반테러 전쟁을 이끌어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했지만, 전쟁이 끝난 이라크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항세력의 크고 작은 테러형 공격이 이어져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됐다. 미국의 대테러 전쟁은 이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영국, 스페인 등에까지 불뚝이 튀어 영국의 경우 지난 7월 런던 지하철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인 폭탄테러 공격을

받아야 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3주간 저소득층 이민자 2·3세 청소년들의 소요 사태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새로운 양태의 폭동을 경험했다. 사태는 단순 폭력·방화의 차원을 넘어서 서구 선진국들에 이민자를 포용하지 않고서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는 값비싼 교훈을 던져준 문명사적인 사건이었다. 프랑스 사태를 전후해 미국과 호주에서도 인종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사건들이 이어져 서구 선진국들로 하여금 인종 융화정책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는 계기가 됐다.

대량살상무기와 대규모 테러 등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안보위협은 어느 국가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초국가적 정치·경제·사회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면서 초래된 결과이며, 새로운 안보위협은 어느 한 나라가 통제할 수 없는 이슈 영역이 되었다.

2005년 국제정세는 향후 국제평화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교훈을 준다. 대량살상무기와 대규모 테러 등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안보위협은 어느 국가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초국가적 정치·경제·사회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면서 초래된 결과이며, 새로운 안보위협은 어느 한 나라가 통제할 수 없는 이슈 영역이 되었다. 저개발 세계의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냉전의 종식을 맞았고, 결국 동유럽과 남아시아에 걸쳐 실패한 국가와 불안한 국가의 띠가 형성되었다. 그것이 소위 '불안정 호'(arc of instability)이다. 이러한 약한 국가들은 밖으로는 잦은 충돌과 안으로는 인권 유린의 원천으로서 국제질서에 위협을 가해 왔으며, 이제는 선진세계를 공격하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와 연결된 잠재적 혼란소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가 진척되면서 보다 용이한 국제적 움직임과 개방된 국경, 물자와 지식의 이동성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국가단위 중심의 전쟁개념은 약화되는 반면 비국가 행위자의 활동 영역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세계화의 진척은 그 추세에 통합하는 부류와 계속 비통합 지역으로 남아 있는 부류로 양극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화의 혜택에서 배제된 비통합 지역, 즉 세계화 시대 국제경제체제 및 국제사회에서 단절된 지역은 국제안보의 위험지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런 이유로 향후 이들 지역의 단절성(disconnectedness)을 제거하는 것이 국제안보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동북아 정세 회고

동북아의 상황은 세계적 패권체제와 지역적 세력균형체제가 불안하게 병존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 일본의 보통국가화 노선, 러시아의 재등장, 미국의 패권 강화, 남북한 및 양안관계의 유동성 등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는 당장의 불안요인은 없지만 장기적인 평화의 기저도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9·11 이후 동북아 안보구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추세로 특징지워진다. 첫째, 미·중 간에는 반테러·반확산 공동전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조체제가 유지되면서 당분간은 전략적 협력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일 간에는 안보협력 강화가 지배적 추세이다. 셋째, 중·일 간에는 주도권 확보를 위한 암묵적인 경쟁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미·중 및 미·일 관계에 있어서는 협력지향적 쌍무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중·일간에는 역내 영향력 확대를 놓고 상호불신이 심화되는 대립지향적 쌍무주의가 추세라 할 수 있다.

2005년 동북아 정세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제휴 움직임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근래 들어 전략적 연대를 확대하면서 미국 주도의 단극 국제체제를 견제할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2005년 5월 8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로부터 한달 여

가 지난 6월 30일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한 후진 타오 주석은 푸틴과 함께 '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중·러 양국이 다극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할 것과 인권의 지역적, 국가적 특성을 인정할 것 등을 합의했다. 양 정상은 다시 7월 5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 미국의 중앙아시아 지역 주둔군 철군 일정을 요구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을 주도했고 곧 이어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 나란히 참석했다. 더 나아가 양국은 2005년 8월 처음으로 육·해·공·해병대까지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을 황해와 발해만 지역에서 실시하여 향후 중·러간 전략적 연대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물론 중·러 양국이 공식적인 반미전선 구축을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양국은 세계전략과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 일관되게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 일본의 보통국가화 노선, 러시아의 재등장, 미국의 패권 강화, 남북한 및 양안관계의 유동성 등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는 당장의 불안요인은 없지만 장기적인 평화의 기저도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과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보수우경화 추세를 감안할 때 결국 군사대국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이즈미 총리의 우정개혁을 둘러싼 의회 해산과 뒤이은 총선에서의 대승은 고이즈미 수상의 입지를 확실히 다진 것으로 평가되고, 그에 따라 고이즈미 수상은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가능성은 높아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또한 자민당은 11월에 헌법 개정 초안을 발표하여, 이를 계기로 향후 일본사회 내에서 헌법 개정 논의는 적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 구도는 다시 흔들리고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가 없다.

2006년 국제정세 전망

2006년의 국제정세를 주도할 주요 변수로는 일단 미국 주도의 반테러 전쟁과 이라크 전후처리를 주목해야 한다. 이라크 민주정부를 구성할 총선이 시행되어 이라크는 민주주의로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지만 그 전도는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곧 2006년 정세도 상당 부분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정세에 크게 좌우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의 국제정세를 주도할 주요 변수로는 일단 미국 주도의 반테러 전쟁과 이라크 전후처리를 주목해야 한다. 이라크 민주정부를 구성할 총선이 시행되어 이라크는 민주주의로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지만 그 전도는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내년도에 발간할 2005년 판 4년주기 국방태세검토 보고서(QDR, 원래 2005년말 발간 예정이었으나 2006년으로 순연)와 새로운 동아태 전략보고(EASR) 발간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2006년은 부시 2기 행정부가 최근까지 중점을 둔 반테러 전쟁(GWoT: Global War on Terrorism)의 중간평가를 통해 방향전환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이라크 개전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실책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최근 미 워싱턴 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내년 2월 발표할 예정인 QDR에서 '2개 전쟁 동시 수행' 군사전략을 보유하는 것을 비롯해 기존의 이른바 '1-4-2-1' 군사전략을 대체로 유지키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와 함께 미국이 새로운 동아태 전략을 어떻게 정립할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냉전 종식 이후 현재까지 미 국방부는 모두 네 차례의 동아태 전략보고서(EASR: East Asian Strategy Report)를 발간하였으나 1998년 EASR을 마지막으로 아직 총체적인 동아시아 전략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이 범세계적 반테러 전쟁에 4년 이상 정열을 쏟아 부는 동안 아시아에서는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미국의 동아태 전략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미국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을 의식하게 되었다. 미·중 간의 반테러 반확산 협력체제가 작동하는 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인권문제나 기타 걸끄러운 현안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미국과 일본이 범세계적 차원에서 숨가쁜 반테러 공조체제를 지속하는 동안 중국은 지역적 차원에서 조용히 아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아세안+1, 아세안+3,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등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자신감을 축적한 중국이 '공세적'인 지역협력외교 제안들을 쏟아냈고, 군사력 현대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지역 못지않게 동아태지역 역시 에너지 부족, 인간 밀매, 환경악화, 해상수송로 불안정, 마약 밀매 등 소위 '21세기적 안보위협'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중·일간의 치열한 역대 주도권 경쟁이라는 소위 '19세기적 안보위협'이 병존하고 있다.

동북아의 경우 중일관계의 향배를 주목해야 하며, 중국과 일본간에는 잠재적인 경쟁과 갈등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 당분간 추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둘러싼 중국의 반응에서 보듯이 과거사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도 용인하기 어려운 외교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의 경우 중일관계의 향배를 주목해야 하며, 중국과 일본간에는 잠재적인 경쟁과 갈등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 당분간 추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둘러싼 중국의 반응에서 보듯이 과거사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도 용인하기 어려운 외교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고양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 외교적 역할을 자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또한 2004년 9월 선거에서 고이즈미의 자민당이 압승을 거둬으로써 외교노선은 더욱 보통국가화를 지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중국과 일본이 경

제적으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외교적 사안에서는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한국의 입장에서는 2006년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특히 세 가지 추세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한미동맹 조정이다. 최근 국내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라크 주둔 미군 규모가 2007년초 10만 명 이하로 감축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중 지상군 병력이 완전철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변화하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그에 따른 동맹 재조정 추이는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다. 비록 우리가 변화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변화의 방향과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는 북핵 문제 해결의 전망이다. 북핵 문제는 한국 안보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지역안정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현재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6자회담은 5차 1단계 회담을 마친 후 미국과 북한간의 회담외적 문제로 인해 재개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다. 북핵 문제가 2006년에 들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한반도 주변의 안보기류가 좀 더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는 동북아 정세 판도이다. 특히 중·일간의 경쟁구도가 가시화될 경우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을 동북아전략으로 제시하고, 중·일간의 대결구도를 동북아 균형자 역할로 보완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동북아 안보공동체 구상도 그러한 전략의 일부이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중·일관계가 조만간 호전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 다자안보를 동북아 신냉전 구도의 대안으로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06년 북한 정세와 남북한 관계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sccheong@sejong.org

2005년은 북한에게 조국해방 60주년,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 김정일의 선군정치 시작 10주년,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등 기념할만한 사건들이 많았던 한 해였다. 그러나 2006년에는 김일성, 김정일 생일 등 의례적인 기념일 외에 특별히 기념할 행사가 없어 북한은 대내적으로 비교적 조용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인권 공세와 금융제재에 대응하는 한편 동시에 '9.19 베이징 합의'의 합의 이행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등 대외 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2006년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한 관계를 현저하게 발전시켜 놓지 않으면 2008년 이후 고립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북한정권이 이후 대외환경의 심각한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2006년은 대남 관계에서 전향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한 해이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대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경제적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남한에 대해 대체로 협조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참관지 제한 해제 문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이 남북한 관계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07년에는 남한에 '대선정국'이 조성되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여건이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해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낮은 현재의 국내정치 상황이 지속된다면, 2007년 말 대선에서 보수적인 후보가 당선되어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2006년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한 관계를 현저하게 발전시켜 놓지 않으면 2008년 이후 고립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북한정권이 이후 대외환경의 심각한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2006년은 대남 관계에서 전향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한 해이다.

전당(全黨)의 선군사상 일색화 추진과 후계 문제

북한은 2003년 말부터 '온 사회의 선군사상화(先軍思想化)'를 강조하기 시작하여,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리고 2004년부터 전당(全黨)을 선군사상으로 일색화(一色化)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여 2005년부터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04년 11월에 북한에서 발간된 한 문건은 "수령의 사상에 대한 결사옹위는 전당과 전군, 온 사회를 선군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과 하나로 잇달아 있으며 령도자의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과 직결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970년대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추진은 '전당의 주체사상화' 추진으로 이어지면서 김정일 후계체계 확립을 정당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 나타난 현상이 2000년대 중반에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겠지만, '전당의 선군사상화' 또는 '선군사상 일색화' 추진은 김정일 후계자가 당을 장악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전개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4년에는 김정일과 고영희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철의 당내 부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장성택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직무정지를 당하고 그 주요 측근들이 숙청된 바 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북한당국이 장 제1부부장을 '결나

무'로 낙인찍고, 그를 한번이라도 접촉했거나 사진을 찍은 주민을 모두 조사해 지방으로 추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후계자 '추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직접적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1단계에서 잠재적인 장애 요인까지 제거하는 2단계로 나아갔음을 시사한다. 장성택을 '결나무'로 지칭하는 것은 김정일 당 총비서와 같은 뿌리가 아니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다. 장성택과 그 측근에 대한 체계적 숙청으로 인해 당 고위 간부들은 당내 '김정철의 사업체계' 수립에 더욱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미 2002년경부터 당 조직지도부내에서 '김정철 동지의 사업체계' 수립이 시작되었으므로, 김정철의 나이가 25세가 되는 2006년, 또는 김정일의 나이가 65세가 되는 2007년에 후계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북한 내부 여건과는 얼핏 보기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조치가 최근에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이 후계문제에 대한 논의를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계문제에 대한 논의 금지가 후계 준비 작업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이 후계문제에 대한 논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외부세계에서 북한의 후계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빈번하게 그와 성혜림과의 동거 및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 김정남에 대해 언급하기 때문이다.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딸까지 낳은 영화배우 성혜림과 김정일이 동거하였다는 사실은 북한 상층부에서도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일급비밀'이다. 그리고 김정일에 대한 신격화 교양을 받아온 일반 인민들에게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자신과 성혜림과의 동거사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당고위간부들과의 모임에 김정남을 참석시킨 바가 없다. 따라서 김정남에 대한 이야기가

대외접촉을 하는 간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은 김정일 총비서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김정일은 자신의 권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후계문제에 대한 논의를 금지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일이 군부대 시찰시 차남 김정철과 3남 김정운을 대동하고 나타나는 것은 후계문제에 대한 논의의 금지와 무관하게 향후 이들의 군대 장악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은 군부대 시찰시 부인 고영희를 대동하였고, 군 부대에서 고영희에 대한 개인숭배 교양이 진행된 바 있다. 따라서 일반 인민들 사이에서 '평양의 어머니' (고영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반면 아직 김정철과 김정운의 존재에 대해 일반 인민들 사이에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다. 이 같은 상황은 김정일의 후계자가 공식 결정되기까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과거 김정일도 후계자로 공식 결정되기 전에는 일반 인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 김정철의 초상화가 2005년 9월경부터 걸렸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2004년 당기구 개편 시 당 조직지도부 내에 별도 부서를 만들어 '후계자 김정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같은 주장들의 진위는 당장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2002년경부터 당 조직지도부내에서 '김정철 동지의 사업체계' 수립이 시작되었으므로, 김정철의 나이가 25세가 되는 2006년, 또는 김정일의 나이가 65세가 되는 2007년에 후계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과 북핵 문제 해결 전망

2005년 9월 19일 베이징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큰 원칙이 제시되었지만, 합의사항의 이행 시기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이 모호하게 규정되었다. 따라서 2006년에는 대북 경수로 제공 여부와 시점 등

2005년에 타협에 이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쉽지 않은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9.19 베이징 공동성명' 발표 이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이루어지고, 대북 인권 공세도 한층 강화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지난 12월 6일 개인필명의 논평을 통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발동은 우리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강성대국 건설을 희망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핵문제에서 우리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불순한 정치책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이 금융제재 해제와 관련한 회담을 회피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6자회담 재개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06년에 6자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을 제외한 관련국들의 대북 인내심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2007년이 되면 남한이 대선정국에 들어가면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한국정부의 정책이 국내에서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월 7일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을 ‘범죄정권(criminal regime)’이라고 지칭한 것도 북한의 강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동월 9일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이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발이고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엎는 중대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미국이 6자회담 장에 나와 공동성명에 도장을 찍었지만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서는 한 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월 19일 UN총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한 담화에서 “미국이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적대시 정책을 강화하면 할수록 우

리는 핵무기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 것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이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6자회담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지난 12월 13일 최근 북미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지금 북한과 미국은 서로 언론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가장 안 좋은 대화방식”이라고 매우 적절하게 지적하였다. 만약 북한과 미국이 “가장 안 좋은 대화방식”에 계속 의존한다면, 2006년 상반기에는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해도 북미간 대립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북핵 해결과 관련하여 보다 진전된 합의는 2006년 하반기에 가서야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2006년에 6자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을 제외한 관련국들의 대북 인내심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2007년에는 남한이 대선정국에 들어가면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남한정부의 정책이 국내에서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후 고립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2006년에 6자회담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 관계 전망과 대북 정책 방향

2007년 말 남한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이 2006년이 아닌 2007년에 개최된다면 참여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을 대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06년에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못한다면 이후 수년간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남북한 관계가 큰 진전을 이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7년 말 보수적인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차기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이 상대적으로 강경한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후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2006년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관계를 더욱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놓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까지 김정일 총비서와 노무현 대통령 모두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여 왔으므로, 2006년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200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실현되면 그것이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인 2006년에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당국간 대화의 제도화 수준을 한층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차기 정부에 가서 남북연합의 '낮은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초석을 쌓아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은 2005년 12월 15일 『월간중앙』과 한 인터뷰에서 "6차회담 상설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건강문제가 허락하는 대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북한 쪽에서 와달라는 연락이 수차례 왔고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을 다녀와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며 "방북을 위한 남북한 양측 정부의 입장이 다 정리됐다"고 말했다. 만약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지면, 김정일 총비서와의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총비서 간의 만남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남북대화를 통해 대외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장기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 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2006년에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기존의 소극적 입장을 고수한다면,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없는 낮은 수준의 남북대화론자'라는 역사적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는 공식 설명과는 반대의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는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인 2006년에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당국간 대화의 제도화 수준을 한층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차기 정부에 가서 남북연합의 '낮은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초석을 쌓아야 한다.

2007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남북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이전인 2006년에 참여정부는 국가보안법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북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등 남북관계 발전을 제약하는 남한 내부의 냉전적 요소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이 증진함에 따라 더욱 많은 대북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그나마 북한이 공개하는 제한된 정보를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남한이 차단하는 것은 국가이념과 모순 되는 것이며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남북한 정부 모두 2006년이라는 중요한 '기회의 한 해'를 적극 활용하여 민족 전체에 희망을 안겨 주었으면 한다.

세종연구소 신간안내

러시아 국가와 사회

정한구 저

이 책은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체제 변화를 다루고 있다. 지난 스무 해에 걸쳐 러시아는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새 질서를 모색 중에 있다. 이러한 새 질서 세우기는 제정(帝政) 러시아 시대의 서유럽 따라잡기,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과 같이 또 하나의 "위로부터의 혁명"이며, 이의 추진자인 국가와 이와 대면한 사회관계 를 살피는 것이 이 책의 주된 관심사이다. 이 책은 저자가 이상의 문제의식을 갖고 그동안 쓴 글을 모은 것으로서 크게 러시아 정치와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경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그리고 연보(年報, "러시아 국내 동향, 1994-2004")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미국 정세

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delee@sejong.org

2005년 회고

부시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여 2기 행정부를 출범시켰지만, 2005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악재들로 인하여 지지도는 최악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느장 대응, 리크게이트, 대법관 임명 문제 등으로 국내에서 수세에 몰렸으며,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우선 국내적으로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느장 대응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은 의심을 받았다. 특히 연방재정적자로 인하여 카트리나 피해복구를 위한 연방 차원의 재정지원(약 2,000억 달러)이 늦어져서 미국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또한 피해복구 과정에서 주방위군의 대응이 미약했던 것이 이라크 전쟁과 연결됨으로써 반전시위가 확산되었다. 즉 테러와의 전쟁에 과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반전시위가 확산되었고 이라크에서의 철군 요구가 거세졌다.

둘째, 미국 CIA 비밀요원(발레리 플레임)의 신분이 백악관 관리에 의해 누설된 리크게이트(Leak Gate) 사건으로 부시 행정부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었다. 발레리의 남편인 조지프 윌슨 전 이라크 대사가 사담 후세인의 핵무기 개발 혐의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는 부시 행정부 정책에 반하는 주장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소위 ‘괘씸죄’가 적용되어 부인의 신분이 누설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셋째, 지난 9월 사망한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의 뒤를 이어 보수성향의 존 로버츠 판사가 대법원장에 임명되었고, 중도성향의 산드라 데이 오

코너 대법관의 사임으로 공식중인 대법관에 부시 대통령의 측근인 해리엇 마이어스 백악관 법률고문을 지명하였으나, 정실인사와 자질시비 끝에 스스로 사임하였다. 대신 부시 대통령은 강경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는 사무엘 알리토 판사를 지명하였다. 이로 인해 부시 대통령은 앞서 지적한 정실인사로 인해 도덕성에 상처를 입었으며, 새로 지명한 알리토 대법관의 성향 때문에 민주당으로부터 대법원의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부시 대통령에게 2005년은 최악의 해라 할 수 있다. 여러 곳에서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사건이 터져 나왔고, 이로 인하여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는 30% 대로 하락하여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그밖에는 국내 경제문제로 고유가에 따른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가 부시 대통령의 정책수행에 걸림돌이 되었다. 특히 재정적자의 한 몫을 하고 있는 무역적자가 2005년에는 사상 최대인 7,00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를 낮추었던 일등공신은 국내문제보다는 이라크 문제라는 국외문제였다.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되어 국고지출이 늘어나고 미군 희생자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전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이라크전에서 강력한 인화 물질인 백린을 사용했다는 비난에 직면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도덕성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특히 미군 희생자의 수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반전시위가 더욱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핵심 논제는 ‘미군철수’로 변하였

다. 민주당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 일정의 제시를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에서 거부되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라크 주권 완전 회복'과 '이라크인에 의한 이라크 치안 유지'라는 전제하에 이라크 주둔 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수정안(방위정책법)을 제출해 가결시켰다. 특히 이 법에는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상황 진척에 관한 보고서를 3개월 마다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정책을 의회가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게다가 부시 행정부는 곳곳에서 외교적 실패를 경험하면서 좌절을 겪기도 했다. 예를 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란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위한 IAEA 설득에 실패하였고, 미주자유무역협상(FTAA)안 또한 무산되었다. 한마디로 미국은 국제사회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2005년이였다.

2006년 정세전망

2005년에 발생한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006년에도 지속적인 논란이 있을 것이다. 우선 '이라크에서의 철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라크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를 한다면 테러집단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론에 밀려 철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미군의 완전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이라크 주둔이 무한정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며, 공화당도 미군이 필요 이상으로 주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당간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최근 리크게이트의 피해자인 윌슨 전대사 부부가 부시 대통령과 측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게다가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부시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간주되고 있는 칼 로브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수사 대상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 부시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으며, 윌슨 부부가 제소할 경우 부시 대통령은 재임 중 소송사건의 피고로 증언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셋째,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 경제의 고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2006년 미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물론 2005년 경제성장률(3.4-3.5%)보다는 조금 낮을 것(3.3%)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설비투자과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라크에서 미군 희생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전시위가 확산되고 철군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철군을 위해 이라크 정부 수립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이라크 치안을 이라크인에 이양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군 철수는 단계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으로 실행될 것이다.

끝으로 미국 정책수립 라인에 전통 보수주의자들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미 2005년 전통적인 보수주의자인 라이스가 국무장관에 임명되었으며, 보수성향이 강한 로버츠 판사가 대법원장에 임명되었고, 이어 강경 보수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는 알리토 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됨으로써 미국에서 보수주의의 강화가 시사되었다. 반면에 신보수주의의 수장격인 체니 부통령이 리크게이트와 헬리버튼의 이라크 수주 특혜시비에 휘말려 있어 정치적 입지가 매우 좁아졌다. 게다가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부시 대통령의 피로감이 쌓여 부시 대통령은 네오콘과 일정 거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정책전망

부시 행정부는 2006년 11월 하원 전체와 상원의 1/3을 뽑는 중간선거를 치루어야 한다. 물론

앞서 지적한 많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승리가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선거 결과에 따라 2007년 부시 행정부의 국내 및 외교정책 추진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2006년 부시 행정부의 국내외 정책은 2005년의 악재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

우선 선거가 있는 해이기에 국내문제, 특히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노인 의료보험에 대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다.

신보수주의가 퇴조하고 전통 보수주의가 부활함에 따라 미국의 외교정책은 동맹 재조정보다는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따라서 강대국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한국과의 관계도 강화될 것이다.

둘째, 물론 부시 대통령은 미군의 철수 시한을 확정하는 것은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이라크 내의 테러리스트들과 싸울 것이며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주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미국 국내 여론과 이라크 대통령(잘랄 탈라바니)의 ‘내전을 우려한 단계적 철수’ 요청을 수용하여 단계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의 철군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반전시위와 철군논쟁은 미군 피해자가 증가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이라크 추세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교분쟁 양상을 띠고 있다. 즉 저항세력의 공격 대상이 미군에서 이라크 주민들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대규모의 철군보다는 이라크 정부 수립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아울러 이라크 치안 요원(경찰과 군대) 훈련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이다. 치안을 이라크인에게 맡기면 상대적으로 미군의 피해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도대로 이라크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고 치안요원의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최

근 미국에서 나들고 있는 이라크 주둔 미군 1/3 감축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전쟁이 석유전쟁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쉽게 이라크에서 철수할 것이라 예상할 수만은 없다. 최악의 경우 이라크에 완전한 친미정부가 수립되지 않는 한 석유라는 자원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병력을 이라크에 영구히 주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앞서 지적한대로 미국에서 전통 보수주의가 부활함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 네오콘의 영향력이 강할 때 미국이 보여주었던 일방주의 외교나 동맹의 재조정 같은 정책은 다소 후퇴할 것이다. 즉 향후 부시 행정부는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라이스 국무장관이 전통적인 동맹국들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낸 것에서도 발견된다.

넷째, 부시 행정부는 유엔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물론 유럽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으나, 미국은 평화구축위원회, 인권위원회 및 윤리청 설치와 유엔 사무처의 회계, 조직, 관리 및 책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유엔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시도될 것이다.

2006년 한미관계 전망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2005년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11월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협력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 정례화되는 한미 외교장관들의 전략대화(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 SCAP)는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the future direction of our alliance)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전략대화는 한 두 차례의 회의를 거친 후에 일본과 같은 ‘2+2 회의’로 발전될 것이다. 즉 한미관계가 미일관계와 같이 보다 평등한 관계로 발전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한편 2006년 한미간의 주요 이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 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의 안보와

한미간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이지만 양국의 협의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북미관계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위조지폐 발행 의혹이 부각되면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다루어질 것이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논의에서는 한미간의 시각차이가 크기 때문에 갈등이 예상되고, 전시작전권이양에 관한 협상에서는 '이양 로드맵' 정도가 작성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보다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국은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하겠지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선 경수로 지원'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해체된 이후 경수로 사업을 고려해 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부각시키고, 위조지폐발행과 관련하여 북한을 범죄국가로 몰고 갈 것이다. 따라서 2006년 북미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정책연구

세종정책연구 제1권 1호

- 남북한 경제협력과 한미 경제협력의 발전과정 비교연구: 國益의 관점에서 양운철
- 북핵문제와 일본의 안보정책: 북일관계와 6자회담의 전개 김성철
- 9·11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반도 이대우
- 정치경제 발전모델 비교연구: 세계화, 탈산업화 시대의 생산레짐 강명세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East Asia: North Korea, China and Korean Security 이상현
- Cooperative Security Regimes : A Comparison of OSCE and ARF 정은숙
- 6·15 남북공동선언 전후 북한의 민족공조전략 실상: 내용, 전망, 대응 김해중

세종정책연구 제1권 2호

- 논문
- 러시아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한구
- 특집 : 한미안보포럼 발표논문
- SESSION 1: R.O.K.-U.S. RELATIONS
- Michael McDevitt / Joon-Hyung Kim
- Doug Bandow / Sang-Hyun Lee
- SESSION 2: NORTH KOREAN NUCLEAR ISSUE
- Larry A. Niksch / Geun Lee
- Selig S. Harrison / Haksoon Paik
- SESSION 3: INTER-KOREAN RELATIONS
- L. Gordon Flake / Yu-hwan Koh
- David C. Kang / Taehyun Kim

2006년 중국 정세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thlee@sejong.org

2005년에도 중국의 정치와 대외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중에서도 후진타오가 군사위 주석직을 물려받아 명실상부한 후진타오 체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한 한해였다. 중국의 호요방의 복권이 중국정치의 변화로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지만 이도 같은 공청단 출신인 후체제의 공고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일뿐 별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안정되었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날로 악화된 한해였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을 성사시켜 중국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지만 성공적인 후속 조치에 대한 부담도 지니게 되었다. 지나간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2006년의 중국정치, 경제 및 대외관계 전망을 해보기로 한다.

국내정치 전망

2005년 중국은 국내정치면에 있어 후진타오 체제가 공고히 되면서 장쩌민 시대와 차별화되는 변화가 있었다. 권력관계에서 볼 때 장쩌민의 측근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썩칭훙이 후진타오 체제에 순응하여 협력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정부 인사차원에서는 7월 국무원 개각에서 후의 측근이 노동부, 복지부, 법무부 등에 기용된 점을 들 수 있다. 또 홍콩의 수장을 교체했을 뿐 아니라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야당지도자들을 중국에 초청하여 대만 문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는 대만 독립 선포시 무력불사를 외치던 장쩌민 시대와는 다른 접근법이다.

후 체제의 공고화는 12월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해·공군 및 과학기술 전문가 발탁을 특징으로 한 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데에서도 나타난다. 총정치부 부주임 탕텐바오(唐天

標) 상장 후임에 류전치(劉振起) 총정치부 주임조리(공군 중장)를, 류 중장 후임에 퉁스핑(童世平) 해군 정치부 주임이 임명되었다. 총참모부에 지난 1월 해·공군 장성 2명이 부총참모장에 임명된데 이어 인민해방군 정치 통제조직인 총정치부에도 해·공군이 진입하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군수 지원을 담당하는 총후군부 부부장에도 공군 부사령원 리마이푸(李買富) 중장이 임명되어 해공군을 중요시하는 후진타오 정부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2005년 중국은 국내정치면에 있어 후진타오 체제가 공고히 되면서 장쩌민 시대와 차별화되는 변화가 있었다. 권력관계에서 볼 때 장쩌민의 측근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썩칭훙이 후진타오 체제에 순응하여 협력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국내의 정치사회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도농간의 소득 격차, 부패, 국유기업에서의 대량실업사태 등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화로운 사회' 라는 기치아래 균형정책을 추진해 왔다. 당내 경제와 균형장치를 강화하고 의사결정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들의 요구에 더 호응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지방세 삭감 등을 통한 농촌의 농민 소득 증대가 그러한 예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만을 표출하는 시위는 계속 증가하여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2006년도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여 후진타오 정부는 더욱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균형정책을 심화시킬 것이다. 공산당의 일당독재는 계속 유지하되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다원화 현상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중국경제 전망

2006년에도 중국은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세계의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고도성장을 유지 관리하는가이다. 지나친 고도성장은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히 균형을 취하고자 한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정부는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는 2006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시장경제체제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중국은 금융정책에서도 시장을 기초로 하는 이자율 체제를 확립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금년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기도 했다.

다른 문제로는 대미무역흑자와 위안화 절상 문제가 있다. 중국의 2005년 외환보유고는 대략 8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외환보유액은 1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무역수지흑자에 기인하는 것이다. 2005년 12월 찰스 슈머 민주당 의원은 중국이 위안화 재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무역보복 법안 투표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위안화가 절상될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고 2005년에 소폭 절상한데 이어 2006년에 다시 한번 절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06년부터 일반투자자의 외환거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환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시장 조성자(마켓 메이커)'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고 시장조성자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율변동 폭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5년 7월21일의 위안화 절상시 도입했던 복수통화바스켓제도가 사실 고정환율제에 더 근접한 제도라면, 마켓 메이커 제도는 시장 친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절상폭과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상하이증권보는 달러 대비 위안화 절상폭을 $\pm 3\%$ 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만 중국정부의 입장

을 감안하면 대폭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미관계

2005년에 중국은 국내적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낳았다. 미 국방부 대의회 연례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 평가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의 방위백서도 중국을 위협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미 일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미중간의 긴장이 증가하기도 했다. 미중 간에는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위안화 절상문제, 중국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 에너지 경쟁, 대만문제 등 여러 가지 이견을 보이는 문제들이 남아있다. 다른 한편 이같이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로 인해 미중은 협력관계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대테러전과

대만문제를 포함하는 지역안보에 관해서도 양국간 대화를 통해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005년 8월 1-2일에 처음 실시된 전략 대화인 미중 고위급 대화도 그러한 시도의 예이다.

비확산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하여 왔다. 미국은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이란문제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동과 대테러전으로 바쁜 미국은 전 지구적 차원이 아닌 아시아 지역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한 핵과 6자회담이 좋은 예이다. 대만문제를 포함하는 지역안보에 관해서도 양국간 대화를 통해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005년 8월 1-2일에 처음 실시된 전략 대화인 미중 고위급 대화도 그러한 시도의 예이다. 지구적인 이슈인 UN 개혁안에 대한 공동보조도 이루어졌다.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등 4개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엔 개혁안에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양국의 관계가

이미 세계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2006년에는 양국간 전략대화과 국방장관 방중을 계기로 군사 안보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일관계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지속적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중일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되었다. 그러나 중일간의 문제는 첫째, 두 나라의 전략 목표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지역내 패권 경쟁이 긴장 상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대만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이다. 그 외에 역사교과서 문제, 춘샤오 가스전, 조어도(셴카쿠) 문제 등 해양 및 에너지 자원 개발과 연관된 영토 문제 등으로 중일관계가 악화된 것이다. 2006년에도 관계는 크게 호전될 것 같지 않다. 그중에서도 특히 석유 자원 확보에 대한 중일 경쟁이 점점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원유 수입국이 되었고, 2020년에는 원유 소비량의 60%를 해외로부터 수입해야만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일간의 문제는 첫째, 두 나라의 전략 목표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지역내 패권 경쟁이 긴장 상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대만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이다.

대러관계

2005년 중러관계는 강화되었다. 하나는 군사협력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협력이다. 2005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 훈련을 하여 미일의 경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훈련은 군사적 관계에서의 양국의 관계와 상호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무기 판매와 구입을 위한 전시장이 되기도 한다.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중국에게 이 합동훈련이 무기 성능 실험장으로서의 효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에너지 협력은 중국의 에너지 수요 급증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수입량은 2005년 1,000만 톤에서 2006년에는 1,500만 톤으로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5년 1월 23일자 중국신문사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는 2010년까지 중국에 석유 5,000만 톤을 제공하기로 합의 했다. 러시아 국영 석유 로즈네프트가 2005년부터 6년 이내에 모두 5000만 톤의 석유를 중국에 공급하고, 우선 400만 톤은 2005년에 제공하였다. 러시아가 중국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대가로 중국은 러시아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2004년 러시아 방문 시 2020년까지 1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대한반도 관계

중국은 6자회담 개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6자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한을 설득하여 6자회담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 초안이 만들어지게 된데도 중국의 역할이 컸다. 이러한 중국의 역할은 200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APEC 정상회담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북한을 공식 방문한 것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북미관계는 위폐사건 등으로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미중의 관계가 원만히 유지되는 가운데 중북관계를 고려할 때 6자회담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내용적인 합의를 보기에는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합의와 대응

2006년에 후진타오 정부는 체제 공고화 작업을 가속화할 것이다. 중국경제는 더욱 고도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한 중국과 인도나 미국, 일본과의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동북아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대외관계에서 대만문제가 다시 미국과 긴장을 일으킬 가능성은 줄었기 때문에 대미관계는 안정 지향적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는 낙관적이지 못하다.

6자회담 전망도 낙관적이지만은 않지만 중국의 역할에 기대하는 한편 미중관계에서 북한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에 예의주시해야 한다. 미중의 전략

적 이해는 북한문제 보다 더 큰 차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북한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 차이가 있을 것을 간과해서도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중관계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로서 경제와 무역, 문화뿐 아니라 군사 안보에 있어서도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중관계의 심화가 동북아 안보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즉 중일의 경쟁구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종연구소 간행도서 목록

세종정책총서

1. 『한반도 평화확보: 경험,방안, 그리고 선택』, 송대성(저)
2. 『러시아 국가와 사회: 새질서의 모색』, 정한구(저)
3. 『동아시아 역학구도』, 김기수(저)
4. 『한국의 국가전략: 전략환경과 선택』, 백종천(편)
5. 『신 세계질서와 동북아 안보』, 이상현(편)
6. 『러시아 외교안보정책의 이해: 고르바초프에서 푸틴까지』, 정은숙(저)
7.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 정성장·백학순(공저)
8. 한·미동맹 50년: 분석과 정책, 백종천(편)
9. 주변국 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송대성(편)
10. 경제위기와 복지의 정치, 이숙중(편)
11. 미중일관계와 동북아질서, 김성철(편)
12. 남북화해시대의 주한미군, 홍현익, 송대성, 이상현(공저)
13. 정치 엘리트 연구, 2002: 중국, 일본,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면우(편)
14.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를 중심으로, 이태환(편)
15.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의 정치경제, 진창수(편)
16. APEC과 ASEM의 비교 연구: 경제적 이해와 전략적 경쟁, 김기수(편)
17. 전환기 한·일관계, 이숙중(편)
18. 동북아 환경협력, 이태환(편)
19.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주변 4강, 홍현익·이대우(공편)
20.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변 4강의 대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이종석·백학순·진창수·홍현익
21. 한국과 일본의 금융개혁, 진창수(편)
22. 미일동맹외교, 김성철(편)
23. 국제통화체제와 동아시아 통화협력: 통화권력과 경제적 이해, 김기수·왕윤중(공저)
24. 2000년대초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백종천·송대성(공저)
25.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박기덕(편저)
26. 미·중·일·러의 대북정책: 주변4강 2000, 정은숙(편)
27. 전환기 러시아의 대외정책, 홍현익(편)
28. 한국 대외정책의 평가 및 발전 방향, 이대우(편)
29. 정상외교와 한반도: 주변4강 1998-1999, 이태환(편)
30. 21세기 동북아 평화증진과 북한, 백종천·진창수(편)
31. 달러·유로·엔: 국제통화질서외 재편, 강명세·이숙중·정진영·조홍식
32. 평화체제 구축 국제적 경험과 한반도: 중동 및 북아일랜드 경험을 중심으로, 송대성·이대우(공저)
33. 미국정당과 외교정책, 최선근·김종완(공저)
34. 일본의 외교정책, 김성철(편)

2006년 일본 정세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jincs@sejong.org

2005년도 일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것이었다. 선거 전 212석에 불과했던 자민당은 296석을 차지하면서 자민당 단독정부 붕괴 이후 15년 만에 기록적인 승리를 이루었다.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은 고이즈미 수상의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 된 것인 만큼 고이즈미 수상의 영향력은 일본 정치에서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이즈미 수상이 2006년 9월 경에 수상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이즈미 수상의 정치 일선에서 후퇴는 일본 정치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06년 일본의 정치 변화가 대 한반도 정책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국내 정치의 변화

2005년 9월 11일 중의원 선거는 고이즈미 정권의 저항세력을 일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자민당의 파벌은 거의 기능부전이 되어 당 전체를 '고이즈미당'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이는 일본 정치에서는 수상의 역할 강화 또는 리더십의 강화를 통한 개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나의 자민당내 '반 고이즈미' 세력을 축출한 것인데, 개혁에 찬성하는 '친 고이즈미' 세력은 선거를 통해 단번에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민당의 파벌은 거의 기능부전이 되어 당 전체를 '고이즈미당'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이는 일본 정치에서는 수상의 역할 강화

또는 리더십의 강화를 통한 개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자민, 공명 양당만으로도 중의원에서 2/3의 의석을 확보하게 되어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재의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헌법59조에 의하면 중의원에서 가결한 법안을 참의원이 부결시킬 경우에도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2/3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될 경우에는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다. 여당이 중의원 전의석의 2/3 이상에 달하는 320석을 넘는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참의원이 반대하더라도 법안의 성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참의원이 가지고 있던 '법안의 생사여부를 가지는 권리'가 없어진 셈이다.

2005년 10월 개각으로 인해 정부 내에서도 보수 우익 성향의 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거사문제(특히 야스쿠니 참배 문제)는 한 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우정법안이 성립된 이후 연금제도 개혁문제나 소비세 인상을 포함하는 근본적인 세제 개정 등의 과제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여당은 여야간의 합의를 보지 못했던 연금문제를 합동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 방안도 고려했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야당의 견제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여당은 자신의 법안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고이즈미 수상은 확고한 정치적인 입지를 이용하여 내년에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5년 고이즈미 수상의 참배에 대해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요미우리

신문조차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관계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이즈미 수상이 국내외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일본 국민들이 고이즈미 수상의 행동을 감정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경기침체의 반작용으로 내셔널리즘이 강하게 대두되는 일본 국내의 분위기에서 한국의 대일본 반성과 사죄 요구에 대해 '일본은 언제까지 사과해야 하나'라는 반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둘째 고이즈미 수상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공약에 대해 벌써 다섯 번이나 참배를 하면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그가 약속한 공약을 지킨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그 결과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 문제는 일본의 국제적인 관계나 국익이 우선되기보다는 고이즈미 수상의 결행 여부에 따른 정치적인 흥미거리로 전락하게 되어 수상의 개인적인 인기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셋째 중국과의 정치적인 게임으로 비쳐지게 된 점이다. 따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중국과의 정치적 기선 제압에 누가 승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환원되면서 일본의 자존심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포스트 고이즈미 구도에서 유리한 것은 아베 관방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관방장관은 정부 대변인을 겸하고 있어 쉽게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고이즈미 총리가 아베를 관방장관으로 기용한 데는 각료 경험이 없는 그에게 짧은 시간에 국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계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2005년 10월 개각으로 인해 정부 내에서도 보수 우익 성향의 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거사문제(특히 야스쿠니 참배 문제)는 한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2006년의 정치 변화에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포스트 고이즈미가 누가 될 것인가에 있다. 2005년 10월 개각에서는 포스트 고이즈미 4인방으로

거론되어 왔던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이 배제됨으로써 사실상 경쟁에서 탈락했다. 이로써 포스트 고이즈미 구도는 온건파인 후쿠다가 배제된 채로 강경파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과 우파인 아소 타로 외무장관, 그리고 다니카기 사타카즈 재무장관으로 압축되었다. 현재 포스트 고이즈미 구도에서 유리한 것은 아베 관방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관방장관은 정부 대변인을 겸하고 있어 쉽게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고이즈미 총리가 아베를 관방장관으로 기용한 데는 각료 경험이 없는 그에게 짧은 시간에 국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계산도 있을 수 있다.

대외 관계

고이즈미 수상은 남은 임기(내년 9월)중에도 동북아와의 갈등에는 개의치 않겠다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비판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외무 장관에 강경파인 아소 타로와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에 아베 신조가 임명되어 향후 외교 정책에는 이들의 강경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아베 관방장관과 아소 외무장관 두 사람 모두 미국과의 관계를 외교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친미인사인 만큼 일본의 외교관계 비중은 아시아 관계를 무시한 채 더욱 더 미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주일 미군 재배치를 통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헌 준비의 가속화 등 일본이 아쉬운 외교 정치현안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다.

아소 신임 외상은 창씨 개명이 "조선인이 희망해 이뤄졌다"는 망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총리가 야스쿠니에 가지 않는다고 일중관계가 갑자기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중국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소 신임 외상은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의 방일을 적극 추진하였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불편해질 수 있다.

이점에서 일본외교에서 한국과 주변국의 비중은 그 만큼 낮아질 가능성은 높으며, 중·일간, 한·일간의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외교에서 한국과 주변국의 비중은 그 만큼 낮아질 가능성은 높으며, 중·일간, 한·일간의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북일 관계의 국교정상화 교섭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수상은 자신의 임기 내에 북일 국교정상화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반면 북일 관계의 국교정상화 교섭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수상은 자신의 임기 내에 북일 국교정상화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높이며,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할도 확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점차 일본이 납치문제에만 매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외무성이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하기에는 정치적인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 또한 아베 신조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 의원들도 납치문제에만 집중한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어 점차 북일 교섭에 대한 의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이즈미 수상의 압승은 북일 교섭을 적극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한국의 대북 정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대목은 대북 강경파인 아베 관방장관의 등장이 북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다. 고이즈미 수상이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일 교섭을 진행시킴으로써 한반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었다. 이번 아베 장관의 기용이 반대파를 포섭하는 고이즈미 수상의 전략이라면 북핵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실 아베 관방 장관이 수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북 강경파라는 이미지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일본의 정치권에서 자주 들린다. 아

베 관방장관이 북일 교섭에서 강경파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면서 북일 국교정상화에 적극성을 띠다면 동북아 질서에 일본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베 장관이 이전처럼 대북 강경노선을 유지하면서 경제 제재를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본 외교정책이 나아갈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미국과 함께 아베와 아소의 강경파 목소리가 반영되어 한반도를 압박하는 정책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일본이 미국의 힘을 입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인 역할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그 만큼 갈등도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의 대응

고이즈미 수상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로 인해 야스쿠니 참배의 강행은 내년에도 가능성은 높아졌고, 이에 따른 한·일 갈등도 지속할 수밖에 없어졌다. 그렇다고 고이즈미 수상의 행동만을 비난하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보다 한일간의 안보협력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한일간의 협조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에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과거사문제와 안보문제 등을 분리해 추진하는 정부의 합리적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

고이즈미 수상의 행동만을 비난하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보다 한일간의 안보협력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한일간의 협조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에 들어가고 있다.

장과 가치추구를 보여줌으로써 한·일간의 안보협력 필요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제2기 역사공동위원회를 지속시키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의 추도시설을 꾸준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향후 일본외교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우익보수 성향의 일본 정치가들의 대외적 야심을 일본국민들이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특히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일본의 전후 세대와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들 전후 세대는 한국과의 관계를 국제정치상의 힘의 우위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이해시켜주어야 할 것이며, 이들이 이러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향후 일본외교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우익보수 성향의 일본 정치가들의 대외적 야심을 일본국민들이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점에서 국회 차원의 대일본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일본정부 및 의회에 대한 설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은 한·일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야 공동노력으로 의원의외교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중·장기적 차원의 대일정책을 재검토하고 정부에 자문할 수 있는 지원팀을 육성·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건을 통합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일정책의 기본원칙을 재검토하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이 요구된다. 우선 대일정책과 관련된 실무부서(총리실,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간의 정책 협의를 강화하고, 전문가와 국회의원을 포함한 연구회를 결성하여 국민 협동회의를 현실

화해야 한다. 여기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검토와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정부 실무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회의원이 주축이 되어 일본과 협의할 수 있는 전략적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을 통하여 일본에게 한국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일본과 실질적인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는 장이 구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종연구소 신간안내

한반도 평화확보: 경험, 방안, 그리고 선택

송대성 지

한반도 평화확보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여부를 결정케 하는 중요한 요소 중 요소다. 한반도 평화확보 방안에는 화해에 의한 방안, 안보역량에 의한 방안, 북한정권의 질적 변화에 의한 방안, 북한정권 제거에 의한 방안 등 4가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들 각 방안들은 각각 장단점들을 갖고 있다. 참된 한반도평화확보를 위하여 어떤 방안을 적용할 것인가는 하는 문제는 전쟁방지 효율성 여부, 국민들 지지여부, 동맹국 미국의 지지여부, 경제성 여부, 실천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다. 본 서에서 필자는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지혜로운 한반도 평화확보방안의 선택을 위하여 위에 언급한 5가지 기준과 그 동안 남북한 및 중동국가들이 겪었던 경험들로부터 얻은 교훈들을 참고하면서 많은 고심을 하였다. 한반도 평화확보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정책결정자들, 학자들, 학생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읽어야 할 한반도 평화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적 지혜를 압축하여 놓은 단행본.

2006년 러시아 정세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chunges@sejong.org

G8 의장국: 기회와 도전

2006년 러시아는 순환제에 따라 G-8 의장국이 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서방 선진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회담으로 굳혀져 오던 G-7은 1998년 러시아를 정회원으로 초대하였다. 당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안정한 러시아를 정회원으로 받아들인 배경에는 엘친 통치하 경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NATO의 동진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원의 상대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에너지 안보'를 G-8 의제의 중심에 놓고자 전략을 세우고 있다. G-8 회담은 푸틴 대통령에게 강대국으로서의 자국의 이미지 제고뿐 아니라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실리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임에 틀림없다.

집권 6년에 접어든 푸틴 대통령에게 G-8 의장국의 지위는 대내외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러시아로서는 최초로 G-8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2006년 여름 삐체르부르그에서 개최될 3일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그 앞에 있을 일련의 장관급 회담을 주관하게 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원의 상대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에너지 안보'를 G-8 의제의 중심에 놓고자 전략을 세우고 있다. G-8 회담은 푸틴 대통령에게 강대국으로서의 자국의 이미지 제고뿐 아니라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실리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G-8 의장국의 지위가 푸틴 대통령에게는 일련의 도전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지난 5년 푸틴 통치하 러시아가 한발 두발 민주주의로부터 멀어져 왔으며 이제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미국 정가는 물론 그간 비교적 균형적 시각을 보여 왔던 EU로부터도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2005년초, 리버만(Joe Lieberman: 민주당)과 맥케인(John McCain: 공화당) 미 상원의원은 푸틴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담보할 때까지 러시아의 G-8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하였다. 부시 대통령으로서도 러시아 정치의 권위주의화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러시아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무언가 지적을 해야만 소위 민주주의의 신장이 국제안보의 초석이라는 부시 독트린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아프가니스탄과 중동 지역 안정화, 비확산,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이르기까지 푸틴 대통령과의 우호적 관계를 지속시켜야 할 이유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나아가 범세계적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선도하고자 창안된 선진 엘리트 클럽인 G-8의 정상들이 회원국내 민주주의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정치

2004년 봄, 푸틴 대통령이 별다른 실질적 경쟁자 없이 70% 이상의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하면서 여타 부문에서의 그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과연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그나마 엘친 통치하 싹터왔던 러시아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서방 일각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지난 5년 푸틴 대통령 통치하 러시아 정치의 권위주의화 지표로 친크렘린 세력이 장악한 국회, 89개 연방구성체에 대한 중앙의

실질적 통제력 강화, 체첸 공격, 독립 언론매체 압박, 반대성향을 가진 재벌 및 유력인사에 대한 범죄구성,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응집력 강화 추세, 그루지아 및 우크라이나 등 CIS내 선거혁명 국가들에 대한 견제 등을 들고 있다.

2006년 러시아 정국은 2007-2008년 선거 사이클 (2007년말 총선; 2008년초 대선)을 예비하는 해가 될 것이다. 현행 러시아 헌법상 푸틴 대통령은 3선에 도전할 수 없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 자신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가에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그가 3선에 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가 “대통령은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헌법상 3선 연임 불가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다른 요직에 머물다가 “2012년 대선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도 한다.

2006년 러시아 정국은 2007-2008년 선거 사이클 (2007년말 총선; 2008년초 대선)을 예비하는 해가 될 것이다. 현행 러시아 헌법상 푸틴 대통령은 3선에 도전할 수 없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 자신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가에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그가 3선에 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지난 1-2년 러시아 민주주의에 대한 서방의 비우호적 논평을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민주주의론’과 ‘비교정치론’에 관한 전문가적 소양을 키우고 있는 듯하다. 2005년 2월 브라티슬라바 미·러 정상회담시 재치 있게 미국과 러시아 선거제도를 비교한 것이나 4월 대국회 연설에서 상당 부분 자신의 이론적 식견을 제시한 것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자신도 충분히 서방 정치가나 학자들만큼의 지식과 전문을 소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지정학적·역사적 특수성, 정치·경제·사회적 변혁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 결코 러시아가 서방이 우려하는 만큼 불합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리라

는 점 등을 이해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경제

푸틴 정권이 ‘시장경제’의 안착과 관련하여서는 분명 큰 업적을 남겼다는 데에 대해 러시아 안팎의 전문가들이 합의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는 1999년 이래 연평균 약 7%의 성장세를 보여 왔다. 1990년대 적자를 면치 못하던 러시아 재정이 지난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1999년 GDP 규모에 필적하던 대외부채도 20%로 축소되었다. 2005년 무역흑자는 GDP의 16%에 육박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도 1,500만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의 경제성장이 국제적 고유가 등 외적 환경의 덕이라며 인색한 평가를 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통치하 러시아가 ‘시장경제’를 이룩하였으며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현재처럼 높이 지속되는 한 1990년대와 같은 난관을 경험치 않으리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다만 러시아는 12년 전부터 WTO(세계무역기구, 당시는 GATT)의 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06년 4개 회원국(미국, 스위스, 호주, 콜롬비아)과 가입조건과 관련된 쌍무협상을 마무리하면 연내 WTO에 가입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이 내년 G-8의 주요의제로 내세우는 ‘에너지 안보’는 러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의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석유 생산은 1999년 이래 연평균 9%로 성장해 오다가 2004년 유코스 사태의 직·간접 후유증으로 인해 성장세가 주춤해진 상태이다. 상대적으로 천연가스 부문의 전망은 밝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국가가 지분의 51%를 소지한 가스프롬(Gazprom)이 러시아 천연가스사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유코스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가스는 친환경적 연료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가격 또한 급등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세계 매장량의 1/4, 그리고 생산량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할린 유역과 동시베리아 코비크타(Kovykta)의

가스전에 이어 북극 바렌츠해 슈토크만(Shtokman)가스전이 보다 전향적인 개발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2006년 러시아로 하여금 '에너지 안보'를 강조하게 하고 미러관계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물고가는 배경에는 슈토크만 가스전 공동개발 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9월 가스프롬 사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에는 러시아측에서는 가스프롬, 그리고 외국기업으로는 미국의 쉘브론, 코노코-필립스(Conoco-Philips) 등이 참여하게 된다. 2010년을 생산원년으로 하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액화가스(LNG)의 25%가 미국, 그리고 나머지가 유럽에서 소비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12년 전부터 WTO(세계무역기구, 당시 는 GATT)의 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06년 4개 회원국(미국, 스위스, 호주, 콜롬비아)과 가입조건과 관련된 쌍무협상을 마무리하면 연내 WTO에 가입 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외교정책

푸틴 대통령이 2000년 집권하였을 때에는 이미 러시아는 G-8회원국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엘친 대통령의 경우처럼 서방 신진 엘리트 클럽에 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보일 필요가 없었다. 꼭 그 이 유라고는 할 수 없으나 푸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G-8정상으로서의 입지를 향유하면서 다른 한편으 로는 거리낌 없이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서방의 소위 '우려국가'들과의 공식적 협력관계를 도모 하였으며 2005년 들어서는 중국, 인도와의 블라 디보스톡 3자회의, SCO(상해협력기구) 정상회담 을 통한 미군기지의 중앙아시아 철수기한 설정 촉 구, 초유의 대대적 러·중 합동군사훈련 등 G-8 내 여타 국가들과는 대별되는 독특한 균형외교를 펼쳐 왔다. 특히 이란과 북한의 핵확산 문제를 정 치적, 외교적 방식으로 풀고자 하는 다자회담이 유럽과 동북아에서 각각 진행되는 마당에 북핵 6 자회담 참가국인 중·러 양국이 전례 없이 군사적

훈련을 감행한 사실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서방은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푸틴 대통령이 서방과의 통합보다는 지정 학적 혹은 지전략적 구도 속에서 보다 큰 러시아 의 국익을 추구하려는 것일까? 중앙아시아내 민 주혁명의 가능성 및 미국의 군사기지 존재에 대 한 일종의 위협의식은 분명 러시아와 중국 간 공 동이해의 소지가 있다. 러시아내 상당수 정책자 문가들이 미국 배제를 의중에 둔 중국, 인도와의 협력은 러시아의 국익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물론 '유라시아론자'들과 일반인 다수는 바로 이런 균형적 정책을 들어 푸틴 대통 령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여하한 경우에도 2006년 푸틴 대통령은 G-8 의장으로서 서방과 반목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 된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서방에 대한 하급 동반자 로서가 아닌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모습으로만 비추어져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푸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G-8정상으로서의 입지 를 향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리낌 없이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서방의 소위 '우려국가'들과의 공 식적 협력관계를 도모하였으며 2005년 들어서는 중국, 인도와의 블라디보스톡 3자회의, SCO(상해협 력기구) 정상회담을 통한 미군기지의 중앙아시아 철 수기한 설정 촉구, 초유의 대대적 러·중 합동군사 훈련 등 G-8내 여타 국가들과는 대별되는 독특한 균형외교를 펼쳐 왔다.

우리의 정책대응

러시아는 APEC 및 ARF(ASEAN 지역포럼) 회원국, 그리고 ASEAN 대화 파트너로서 보다 적 극적으로 역내 통합에 관여하고자 한다. 2006년 우리는 가급적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첫째, 러 시아로부터의 석유 및 천연가스 공급 계획을 재검 토 혹은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 에도 동북아 지역은 물론 러시아가 유럽 지역 그 리고 북미 지역과 진행 중인 우랄 서쪽 협력사업

의 추이를 동시에 분석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러시아의 WTO 가입이 2006년 사실상 이루어질 전망이다. 우리가 이를 통해 잃을 것을 대비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정부 내 다부처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인접국으로서 사회·문화적 교류를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과 함께 우리와 직접 국경을 접하게 되고 에너지 자원 및 유라시아 진출의 보고가 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면 2006년부터라도 양국민간 건전하게 상호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보다 전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로써 장기적으로 우리의 외교역량을 도모해 두는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과도 협력과 갈등의 요소가 있고 중국과도 협력과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한 쪽으로만 판단하여 정책을 몰고 가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정치나 외교 부문에서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유럽은 동아시아와 달리 이미 1970년대부터 특정국가내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국가간 관계에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어 온 바이다. 러시아가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에서 자국내 정치문제와 관련하여 수세에 놓여 있는 모습은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러시아는 미국과도 협력과 갈등의 요소가 있고 중국과도 협력과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한 쪽으로만 판단하여 정책을 몰고 가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인도가 함께 모여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한다고 선언하는 이면에는 이들이 각각 상호견제하면서 경쟁적으로 대미친선을 도모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는 물론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전략수립 과정에서 이는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명제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어쩌면 2006년 G-8 의장국으로서 그간 북핵 6자회담 틀 내에서는 예견치 못했던 미국, 일본과의 대북핵 협력안을 마련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종연구소 신간안내

동아시아 역학구도

김기수 저

이 책은 주제 자체가 암시하듯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포괄적인 시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아마 국제적으로도 그 예를 찾기 힘들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 및 이해 관련 강대국들의 역내 세력 경쟁을 안보는 물론 경제관계, 나아가 부분적으로는 이데올로기 분야까지 확장하여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실로 방대한 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필자는 아래의 핵심 논점들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역학구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동아시아의 역학구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다면적 접근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세력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요소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힘은 세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투사된다. 군사, 경제 그리고 이데올로기 등이 그것인데, 진실로 강한 국가는 세 분야 모두에서 권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역사상 세 분야 모두에서 효과적으로 권력을 투사한 국가는 미국 이외에는 없었다. 동아시아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무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군사 및 경제분야의 세력구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관류하는 일반 원칙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럽에서와 같이 세력균형이 근세 및 현대의 동아시아를 지배했다는 사실이고, 나아가 근세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들이 현재에도 그 영향력을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 또한 감지된다. 다음으로 경제분야의 경우, 다음의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같은 문제를 짚어 볼 수 있다. 동아시아의 경제구조가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를 제공했던 외환위기와 그것과 관련하여 강대국들이 행사한 권력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환율문제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동아시아만의 지역주의는 현재까지 왜 불가능한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총체적인利害는 무엇이고, 그것의 관철에 걸림돌은 어떤 것인가?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역외 국가들의 이해가 합치하지 않음이 발견된다. 그러나 아직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동아시아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끝으로 대외경제관계를 쌍무적 수준에서 관찰하면 당연히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등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임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개별 변수들의 중요성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구조적으로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이라는 경제변수가 중요한데, 다른 변수와 비교하여 우리 경제구조 자체에 가장 깊숙이 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중 경제관계는 통상을 중심으로 수평적인, 즉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엇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세와 정책」 최근 출판목록

2005년 12월호(통권 114호)

- 이재승, "APEC 정상회담의 성과와 평가"
- 조성렬, "제5차 1단계 6자회담 평가"
- 송화섭, "주일 미군 재배치 분석"
- 차창훈, "미·중 군사교류 재개의 의미와 전망"
- 은재호, "프랑스 소요사태와 이민실태 분석"

2005년 11월호(통권 113호)

- 김기수, "APEC 정상회의의 의의"
- 이남주, "중국공산당 제16기 5중전회의에 대한 분석"
- 양문수, "남북교류협력의 관점에서 본 대북관광사업"
- 강명세, "독일 총선 분석"

2005년 10월호(통권 112호)

- 『정세와 정책』 편집기획위원회
"6자회담 타결" 특집을 마련하면서
- 홍현익, "제4차 6자회담: 평가와 대책"
- 서보혁, "베이징 공동성명과 대북 안전보장 문제"
- 전성훈, "북핵 폐기와 검증"
- 양운철, "6자회담의 타결과 향후 대북지원 방향"
- 송대성, "21세기 국가정보기관의 임무와 기능"
- 이상현, "국방개혁의 방향과 과제"
- 이면우, "2005년도 일본 중의원 총선거 결과와 전망"
- 김열수, "한국의 위기관리체제: 평가와 대책"

2005년 9월호(통권 111호)

- 정성장, "8·15민족대축전과 남북교류협력 발전을 위한 과제"
- 이태환, "미중 고위급 회담과 후진타오 방미의 의의"
- 정은숙, "중앙아시아 미군기지 문제: 합의와 전망"
- 박종평, "현 중동정세와 향후 전망"

2005년 8월호(통권 110호)

- 송대성, "한국군 문화와 국방안보역량 강화방안"
- 이호철, "중·러 정상회담과 군사협력 강화의 의미"
- 이상현, "미·인도 핵협력의 전략적 의미"
- 하중문, "일본 우익 교과서 채택 움직임과 한일관계"
- 정상률, "이란 대선 이후의 중동 정세 변화 전망"

2005년 7월호(통권 109호)

- 『정세와 정책』 편집기획위원회, "6·15 공동선언 5주년: 성과와 과제" 특집을 마련하면서
- 정성장, "남북정상회담 이후 당국간 대화의 성과와 과제"
- 남성욱,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성과와 전망"
- 김성한, "한미 정상회담과 후속 과제"
- 이면우, "'셔틀' 외교의 의의: 2005년 제1차 한일정상회담 재고"
- 강명세, "기रो에 선 유럽연합: 어디로 갈 것인가?"

2005년 6월호(통권 108호)

- 백승주, "남북차관급 회담 평가와 후속과제"
- 한석희, "헨잔 방문과 양안관계"
- 남수중,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절상 가능성과 영향 분석"
- 김기석, "일본 우정 민영화 문제의 이해"

2005년 5월호(통권 107호)

- 진창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한국의 대응"
- 정은숙, "유엔 안보리 개혁과 한일관계"
- 이면우, "일중 갈등의 조형도"
- 김태현, "동북아 평화균형자론과 21세기 "한국전략"

2005년 4월호(통권 106호)

- 양운철, "6자회담과 남북경협"
- 전봉근, "통일외교국방 업무혁신: 성과관리제 도입 배경과 방법론"
- 이상현, "미 민주주의증진법의 내용과 의의"
- 김홍규, "중국 제10기 전인대 3차회의: 내용과 의미"
- 최봉태, "일제 강제동원피해 특별법"

2005년 특집호(통권 105호)

- 『정세와 정책』 편집기획위원회, "'북한 핵 보유 선언: 대책과 전망' 특집호를 마련하면서"
- 정성장, "2·10 북한 외무성 성명의 배경과 의미"
- 이대우, "미국의 반응과 정책전망"
- 진창수, "일본의 반응과 정책전망"
- 이태환, "중국의 반응과 정책전망"
- 정은숙, "러시아의 반응과 정책전망"
- 이상현, "한국의 반응과 정책전망"

2005년 3월호(통권 104호)

- 이대우, "부시 대통령 국정연설"
- 이영길, "미·중 군사대화의 배경과 함의"
- 정은숙, "미·러 정상회담"
- 오승구, "35차 다보스 포럼의 의의와 한국에 대한 함의"
- 최봉태, "일제 강제동원피해 특별법"

2005년 2월호(통권 103호)

- 정성임, "북한의 2005년 신년사와 대내외정책 방향"
- 이면우, "일본의 새로운 방위정책: 신방위대강을 중심으로"
- 하도형, "중국 2004 국방백서 분석"
- 전홍찬, "우크라이나 대선의 국제정치적 함의"
- 유현석, "아시아 지진해일과 국제협력: 한국의 역할 모색"

2005년 1월호(통권 102호)

- 송대성, "2005년 국제 정세와 한반도"
- 정성장, "2005년 북한 정세와 남북한 관계"
- 이대우, "2005년 미국 정세"
- 이태환, "2005년 중국 정세"
- 진창수, "2005년 일본 정세"
- 정은숙, "2005년 러시아 정세"

※ <http://www.sejong.org> 에서 출력 가능함

세종연구소 학술지 안내

『국가전략』 제11권 4호 | 2005년 겨울

- 목 차 -

논문	9·11 테러, 이라크 전쟁과 정보실패 미국의 대외정책과 민주주의 전파: 동기와 딜레마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 대외경제 정책의 딜레마 러시아 동시베리아 송유관 정책결정 요인에 관한 비판적 고찰 『조선중앙년감(1989-2004)』에서 서술하는 독일통일의 과정과 결과: 독일통일에 대한 북한당국의 공식담론 분석 21세기 한국 외교의 좌표와 과제: 동북아 균형자론의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전 응 마 상 윤 김 기 석 이 유 신 김 석 향 김 기 정
서평	북지국가의 정치와 사회협약 신간 안내	강 명 세 이 면 우
부록	미일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가역)	일본방위청

회원제 안내

세종연구소는 아래와 같이 회원제를 실시하여 관심있는 연구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방법】

- 연구소 홈페이지(www.sejong.org)에서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연간 회원자격이 취득됩니다.
- 연회비 : 일반회원 : 50,000원(1년), 120,000원(3년)
학생회원 : 30,000원(1년), 70,000원(3년)
기관회원 : 150,000원(1년), 360,000원(3년)
개인평생회원 : 1,000,000원
단체평생회원 : 3,000,000원

【회원권리】

연구소 주최 연구행사 초청 / 연구소발행 출판물 무료 제공 / 기존 출간도서 구입시 20% 할인

【회원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주 소 : 463-600 경기도 성남시 분당우체국 사서함 45호
| 세종연구소 교육홍보팀 |
연락처 : Tel. 031-750-7611 / Fax. 031-723-8800
e-mail: public@sejong.org

정세와 정책 | 2006년 1월 1일

발행인 | 백종천 편집인 | 이상현 편집기획위원 | 이태환, 정은숙, 진창수, 정성장
편집간사 | 정성일 발행처 | 세종연구소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우체국 사서함 45호 (463-600)
전화 | (031)750-7611 팩스 | (031)723-8800
홈페이지주소 | www.sejong.org

- * 『정세와 정책』은 세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블러틴으로 주요 국제정세와 한국의 대외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 『정세와 정책』에 개진된 의견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